

건설소식

에스컬레이션 업무효율 높아진다

조달청, 검토작업 전산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스컬레이션) 검토작업이 전산화돼 건설사들의 관련 업무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시설공사의 물가조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업무를 전산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계약금액 조정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달청 수요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것이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공사관리 프로그램과 호환되지 않아 별도로 작성해 관리하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를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공정관리, 기성관리, 설계변경 등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물가변동 보고서를 수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특히 물가변동 관련 업무의 경우 작업이 복잡해 전문 용역업체 등에 의뢰하는 사례도 많았으나 시스템 구축으로 건설사가 직접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건설사의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존 엑셀 보고서에서 발생하던 단순 오류가 사라지고 단순 확인 업무는 최소화 하는 등 물가변동 검토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전산화와 표준화는 건설산업 선진화의 핵심요소로 물가변동 분야의 전산화 또한 필연적인 조치”라며 “지난해 5월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 확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물가변동 검토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에 ‘떠 있는 섬’ 조성

서울시, 8,000~1만㎡...민자유치

서울 한강 반포지구를 대상으로 수상문화,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떠 있는 섬 (Floating Island)’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009년 4월 까지 잠수교 남단에 8,000~1만㎡ 규모로 조성될 ‘떠있는 섬’을 건설, 소규모 선박 계류시설과 편의시설, 공연·축제가 펼쳐지는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것.

‘떠 있는 섬’ 사업은 인공섬 건설방식은 아니며 배 모양 건축물 3개 정도 세워 잠수교와 연결하는 부교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는 1단계로 내년 4월 말까지 2,000㎡ 규모의 수상 공연시설을 완

공하고 오는 2009년 4월 중순께 전체 시설을 완공토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 사업을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제시토록 하기로 정했다.

또한 시설의 조성 및 운영 일체를 민간사업자에 20년간 맡긴 뒤 기부채납토록 하기로 했다.

시설물 자동계측장치 의무화

공종별 시방기준 정비...2009년부터

2009년부터 건설시설물의 공종별 자동화 계측시설 설치의 의무화될 전망이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도로, 철도 등의 붕괴사고 방지효과가 탁월한 반면, 공사비, 유지관리비 부담증가가 걸림돌이다.

건설교통부는 과학적 시공 및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설공사 공종별 계측 자동화 시방기준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계측기준'을 전면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건설교통 R&D 연구과제에 포함, 건설기술평가원 주도로 내년 초 시행한다.

기본방향은 현행 도로, 철도, 터널, 교량, 댐 등 공종별 시방서의 계측시

설 기준과 계측자동화를 위한 시방기준을 정비, 강화하는 것이다.

계측시설은 건설현장의 시설물 시공과정의 위험요인은 물론 완공된 구조물의 하중, 진동, 균열, 변이 등을 전자방식으로 감지해 알리는 일종의 자동센서이다.

그동안 공종별 시방서에 계측시설 관련 규정이 일부 포함돼 도로 시공 등에 적용되고 있지만 시설물별 계측시설의 설치위치나 방식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이행률이 낮았다.

반면 새 시방 및 계측기준이 정비되고 공종별 자동화 계측시설이 의무화되면 계측시설 설치이행률이 호전됨으로써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관리 내실화가 가능하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계측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공종별 공사비 예산과 유지관리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이다.

또 당초 10월까지 기준정비를 끝낼 계획이었지만 주택 등 기타분야 용역과제에 우선순위가 밀려 올해 예산마저 반영되지 못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 당초 검토한 '건설계측기술 육성관리법' 제정방침을 기준강화 쪽으로 선회하고 관련 대안모색에 주력하고 있다.

안전기획팀 관계자는 "시공과정은 물론 완공 후 안전사고까지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다만 연구용역 결과, 부처·업계 의견 수렴으로 유지관리 대안, 예산확보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 개편할 방침"이라

고 말했다.

전자계약 뿌리내린다

상반기 73%, 작년비 2배

공공 시설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계약 과정에서 서면계약이 사라지고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전자계약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나라장터에서 이뤄진 11만건의 전자입찰 가운데 8만1,000건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동안 이뤄진 전자계약 실적이 10만건 가운데 3만6,000건인 데 비해 1년 사이 전자계약 체결비율이 36%에서 73%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각 기관에서 자체계약을 추진하면서 입찰공고와 전자입찰은 모두 나라장터를 이용하지만 계약과정에서는 아직도 대면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자계약이 서면계약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전자계약이란 입찰에 참여해 낙찰된 업체와 발주기관이 기존의 서면계약 대신 나라장터를 이용,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업체가 계약체결을 위해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인력과 시간이 절감되고 서면계

약 때 계약서에 첨부하던 인지를 생략할 수 있어 비용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조달청은 특히 서면으로 계약할 경우 수백, 수천 번에 달하던 도장 날인을 전자서명 한 번으로 대체할 수 있어 계약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전자계약은 서면으로 계약서를 만들지 않고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투명성 개선 효과가 크다”며 “장점이 알려지면서 전자계약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전자계약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또 총 2,800여개 공공기관과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자계약 이용실적을 평가,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자계약 이용실적 우수 공공기관으로는 충북 괴산군 상하수도사업소 등 15개 기관을 선정했다.

지하철역 368곳에 스크린도어 설치

2010년까지 1조5,000억 투입

오는 2010년까지 스크린도어 368개가 새롭게 설치된다.

또 방배역 등 10개 지하철 역사에서 올해 안에 석면 철거작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 이런 내용이 담긴 ‘지하철역내 공기질 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환경부와 노동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노후시설의 개체, 오염원 관리기준 강화, 상시감시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하철 역내 공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0년까지 1조 5,100여억원을 투입하며 관련부처, 지자체, 지하철공사가 참여하는 ‘지하철 환경관리 위원회’를 구성,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대책으로 △미세먼지관리 △석면관리 △라돈관리 등이 추진된다.

미세먼지관리를 위해 스크린도어가 2010년까지 서울 지하철 전 역사에 확대 설치되고 노후 환기설비가 개량된다.

스크린도어(관리주체별)설치 수는 △서울메트로 100곳 △서울도시철도공사 143곳 △부산교통공사 73곳 △한국철도공사 33곳 △인천지하철공사 8곳 △광주도시철도공사 11곳 등 총 368곳이다.

또 자갈 노선 구간이 콘크리트로 교체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도가 지금보다 약 20% 저감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지하철 이용자와 근로자들에 대한

석면 노출을 차단키 위해 석면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석면이 사용된 방배역 등 10개 역사의 석면이 철거되고, 이외 역사에 대해서도 노후 정도 등 추가 점검을 한 후 철거작업이 시행된다.

석면사용지도도 작성된다.

아울러 적정인력과 장비를 갖춘 업체가 석면을 처리토록 법이 개정되는 한편 석면 조사·분석가 육성 등 석면해체 관련 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

폭염경보 내리면 탄력시간 근무제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소방방재청은 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장마가 끝나고 열대야·무더위가 엄습할 것에 대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폭염 종합대책 및 관계부처 합동지침’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건교부와 노동부는 사업장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노동부의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에 따르면 폭염주의보 발령 때 사업장은 직원들이 자유 복장으로 출근·근무토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 짧게 자주 가지도록 하는 한편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

토록 하고 있다.

또 폭염경고가 발령되면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를 검토하고 낮 12시~오후 4시에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토록 요구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폭염 대비 행동요령 외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열사업장(주물업·유리가공업)과 옥외사업장(건설·항만하역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기술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 때 전기시설, 가스정유시설 등 폭발위험 시설과 밀폐공간, 냉방설비, 환기시설 등의 관리실태를 중점점검하고 산소농도·유해가스 농도측정기, 송기 마스크 등을 무상 임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한여름철에는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가 나타날 수 있어 일일 최고기온에 이르는 오후 1~3시에는 작업시간 및 작업량의 조절, 물과 염분의 공급 등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에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교부와 산자부는 △가스·정유시설 등 폭발 가능성이 있는 주요 시설 특별 점검 △정전사고 대비 대응 매뉴얼 준비 및 실천 등을 통해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을 차단한다.

한편 소방청은 이번 대책의 미담·수법사례를 발굴·전파하고 기관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오는 10월 말까지 폭염대책 추진결과를 분석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성능 최고등급 4% 가산

건교부, 내년부터 새 기준 적용

내년부터 주택성능등급 우수업체는 기본형건축비의 4%까지 가산비용을 인정받는다.

1,000가구 이상 주택공급 실적(3년)업체 가운데 주택단지의 소비자만족도가 높은 업체는 1년간 건축비 1%를 가산받는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성능등급기준을 고시,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택성능등급별 점수와 가산비율(지상층 기본형건축비 기준)은 95점 이상 4%, 90점 이상 3%, 85점 이상 2%, 80점 이상 1%이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소음등급(중·경량 충격음, 화장실 소음) 45점, 구조등급(내구성, 가변성) 27점, 환경등급(조경, 일조, 실내공기질) 58점, 생활환경등급(주민공동시설, 고령자시설) 15점, 화재소방등급(피난 및 경보시설) 15점 등 160점이 만점이다.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으로부터 예비인증 최우수(50점 이상), 우수(40점 이상) 등급을 받아도 2%와 1%의 가산비율을 적용 받는다.

소비자만족도 평가에서 상위 10%에 포함되면 다음연도 1년간 입주자모집공고 주택의 분양가 산정 시 기본형 건축비의 1%도 가산 받는다.

단지규모별 조사대상 가구는 500

~700가구 미만 60가구, 700~1,000가구 80가구, 1,000~2,000가구 100가구, 2,000가구 이상 150가구다.

평가항목은 계획, 거주환경, 마감 및 설비 등으로 나뉘며 세부항목별로 5단계(매우 불만족~매우 만족)로 나눠 각각 배점된다.

평가방법은 전년도 10월 1일~3월 말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단지를 다음연도 9월 중 신청해야 하고 평가대상 단지가 여러 개 이면 동시평가도 허용된다.

건교부는 이와 별도로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도 공청회 제시안대로 확정, 고시한다.

다만 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 특수형태 주택은 지상층 건축비의 최대 28%를 가산하고 50층 또는 150m 이상 초고층주택은 실제 투입비용을 인정한다.

마이너스옵션 품목은 문(문틀 및 문짝), 바닥(바닥재, 걸레받이 등), 벽(벽지), 천장(천정지, 반자돌림 등), 욕실(위생기구,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주방(주방가구, 가스쿡탑 등기구, 벽타일, 주방TV), 조명기구(부착형 조명 등 기구 매입형은 제외)로 확정됐다.

이들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의 85%와 지하층건축비(100%)를 합친 금액으로 설정했다.

건교부는 9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더라도 12월 1일까지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니 않으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점도 명

시켰다. 〇

주택성능등급 인정에 따른 항목별 배점 기준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성능 항목	성능등급별 점수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소음	경량충격음		3	4	5	6
	중량충격음		3	8	13	18
	화장실 소음		3	6	9	12
	경계소음		-	3	6	9
구조	가변성		3	4	5	6
	수리용이성	전용구분	3	4	5	6
		공용구분	3	4	5	6
	내구성		-	3	6	9
환경	조경 (외부환경)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 태적 기능	3	4	5	6
		자연토양 및 자 연지반의 보전	3	4	5	6
	일조(빛환경)		3	4	5	6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 물질 저방출자 재의 적용	-	3	6	9
		단위세대의 환 기성능 확보	-	3	8	13
	에너지성능(열환경)		3	8	13	18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	3	4	5
생활환경	고령자 등 사회적약자배려	전용부분	-	3	4	5
		공용부분	-	3	4	5
화재소방	화재·소방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	3	4	5
		배연 및 피난 설비	-	3	4	5
		내화 성능	-	3	4	5

주택구조별 가산비율

구분	가산비율 (지상층건축비 기준)	가산비율 (지하층건축비 기준)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무량판구조 포함)	5%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0%	4.8%
철골구조	16%	10.5%